

2020. 11. 30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050121?sid=104>

(요약) 모더나 “백신, 중증 코로나 예방률 100%”...오늘 긴급사용 신청

- 백신 효과가 94%라는 결과는 지난 16일 발표한 3상 임상시험 예비분석 결과 예방률 94.5%와 거의 비슷한 것
- FDA가 긴급사용을 승인하면 몇 주 내로 의료진과 고위험군, 필수업종 근로자 위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미국과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긴급사용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30 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모더나는 자사 백신 3상 임상시험의 최종 분석 결과 94.1%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이날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에 자사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

백신 효과가 94.1%라는 결과는 모더나가 지난 16일 발표한 3상 임상시험 예비 분석 결과 예방률 94.5%와 거의 비슷한 것이다.

3만여명이 참가한 3상 임상시험에서 모두 196 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185명은 플라시보(가짜 약)를 투여한 그룹에서 나왔고,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그룹에서는 확진자가 11명에 불과했다.

특히 중증 환자 30명은 전부 플라시보를 투여한 임상시험 참가자였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모더나 백신 접종자 가운데서는 한 명도 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스티브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분석은 특히 우리 백신의 중증 코로나 19 질환 예방 능력을 확인해줬다"며 "우리 백신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진행 방향을 바꾸고 중증 질환과 입원, 사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새롭고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모더나는 자사 백신이 나이, 인종, 성(性)에 관계없이 일관된 효과를 보여줬으며,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로, 근육통, 두통, 주사 부위 통증과 같은 흔한 부작용이 나타났으나 심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FDA에 코로나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한 것은 모더나가 화이자-바이오엔테크에 이어 두 번째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모두 신기술인 '메신저 리보핵산(mRNA전령 RNA) 방식'으로 개발됐다.

FDA가 긴급사용을 승인하면 몇 주 내로 의료진과 고위험군, 필수업종 근로자 등을 위주로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이다. FDA는 12월 17일 모더나 백신 심의를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모더나가 밝혔다.

앞서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FDA가 가능한 한 빠르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모더나는 올해 안으로 미국에서 2천만회 분량의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승인이 나면 곧바로 배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더나는 11~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시험도 연내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모더나 백신도 면역력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자주 재접종을 해야 하는지 아직 불분명하다고 CNBC는 지적했다.

2020. 11. 30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이투뉴스

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181

(요약) 고정과 현물까지 REC 동반하락...태양광사업자 '이중고'

- 정부가 불안정한 현물시장 해소위해 고정가격계약 물량을 늘렸으나 탄소인증제를 적용하면서 기존사업자 피해
- 발전공기업이 REC를 자체 구매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현물시장에서 REC를 구매 필요가 없어지면서 가격도 하락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현물시장가격이 올해 처음 2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 태양광사업자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불안정한 현물시장을 해소하기 위해 고정가격계약 물량을 대폭 늘렸지만 탄소인증제를 적용하면서 기존 사업자가 불이익을 봤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6일 기준 REC 평균가격은 2만9664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2만원대로 떨어졌다. 같은날 계통한계가격(SMP)가격도 kWh당 50.39원을 기록했다. SMP와 REC가격을 합해도 kWh당 80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통상 SMP가 떨어지면 REC가격이 올라가고 SMP가 올라가면 REC가격이 떨어진다.

하지만 최근 신재생공급의무화(RPS) 시장은 REC와 SMP가 동반 하락하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2만원 중반을 기록한 REC가격은 작년 하반기부터 4만원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3만원선이 붕괴됐으며, SMP도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저유가현상의 영향을 받으며 하락하고 있다.

업계는 발전공기업이 REC를 자체구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현물시장에서 REC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남아도는 REC로 가격도 같이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신재생에너지업체 관계자는 "초기에는 발전공기업이 자체 해결하는 용량이 많지 않아 자연스럽게 현물시장에서 REC 구매를 했지만 최근에는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 살 필요가 없어졌다"며 "장기적으로 REC가격은 내려가는 것이 맞지만 하락세가 빠르다 보니 과거 높은 가격에 현물시장에 들어온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물시장 문제를 해결하고 고정가격계약시장으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입찰용량을 대폭 늘렸다. 하지만 기존 태양광사업자들은 하반기 입찰과정에 도입한 탄소인증제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탄소인증제를 도입해 입찰 모듈을 3등급으로 나눠 1등급 10점, 2등급 4점, 3등급 1점으로 배점을 적용했다. 기존사업자는 탄소인증제가 도입되기 전 산 모듈이 일괄적으로 1점으로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배점차이가 사실상 9점이나 나면서 불공정한 가점 배율로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일부 태양광사업자들은 다음달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탄소인증제 배점 개정과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입찰 분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RPS 고정가격계약과 관련해 에너지공단도 최근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탄소인증제를 포함한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공단은 이 자리에서 현행제도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연내에 개편방안을 고시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공단 관계자는 "RPS시장 개선을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경쟁입찰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다"면서 "대규모 태양광사업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꾸는 방식으로 사업자를 고정가격계약시장으로 참여하게 유도하고, 발전사업자와 제조업계가 미리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규모와 발전기본계획에 맞춰 미리 공고하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사업자들이 요구한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고정가격계약 분리에 대해선 "공단에서도 사업자 분리를 검토하고 있지만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를 분리하면 오히려 기존사업자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무조건 장점만 있다고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2020. 12.01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 처) 투데이에너지

[기사링크](#)

(요 약) 중부발전·탐인프라, 국내 최대 25MW급 수상태양광 준공

- 중부발전탐인프라, 전남 고흥군에 국25MW급의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 건설
- 10월 준공 후 30일에 비대면 방식으로 준공식 거행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과 (주) 탐인프라(회장 정회걸)는 3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남정수상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거행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 준공행사 방식을 탈피해 스튜디오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남정수상태양광 소개와 박형구 한국중

부발전 사장, 윤을진 탐인프라 부회장, 김승남 국회의원 축사를 영상으로 제작해 중부발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남정수상태양광은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 규모인 25MW급 태양광설비를 전남 고흥군에 건설해 연간 3만 5,770M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약 1만3,000여 가구가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중부발전은 지난 2018년 전남 태양광 전문기업인 탐인프라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번 사업을 개발, 2019년 6월에 본공사를 착공해 2020년 10월 준공에 이르렀다. 공사기간 중 지역인력을 우선 채용, 지역업체를 활용한 지역 경제활성화, 갈대밭 생태보존을 위해 노력해 뉴딜선도탄소중립환경생태 보존에 기여했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함께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 정책 선도기업으로 국민과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남정수상태양광 외에도 영광 태양광 발전단지 준공과 새만금육상, 고속도로, 산업단지 지붕, 수면, 염해 부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다수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그린뉴딜 정책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 12.01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 처) 한국경제

[기사링크](#)

(요 약) 미래에셋, 美 호텔 소송전 승소...안방보험서 7000억 돌려받는다

- 미래에셋, 2019년에 안방보험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금 지급했다가 계약 위반사유를 이유로 계약 해지
- 이후 안방보험과 소송전 돌입했으나 최종 승소하여 약 7000억원의 계약금 돌려받게 됨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 호텔 계약을 두고 중국 다자보험(舊 안방보험)과 벌인 법정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약 7000억원의 계약금을 돌려받게 된다. 1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중국 안방보험이 샌프란시스코의 웨스틴, 로위스 산타모니카 등의 호텔 운영을 매매계약 조건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안방보험은 미국 15개 호텔 인수 계약을 이행하라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래에셋 측은 계약금 반환과 관련해 맞소송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국제분쟁 전문 로펌인 피터앤김과 미국 최대 소송 전문 로펌인 쿤 엠마뉴엘을 선임하기도 했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안방보험과 58억달러 규모 호텔 매매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 5월 안방보험이 15개 호텔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안방보험은 그 직전인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계약 이행 소송을 걸었다. 미래에셋은 매매 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됐고 오히려 안방보험이 계약금 5억8000만달러(약 7000억원)를 반환해야 한다고 맞섰다.

(출처) 이투뉴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188>

(요약) 분산에너지법 제정...분산편익 지원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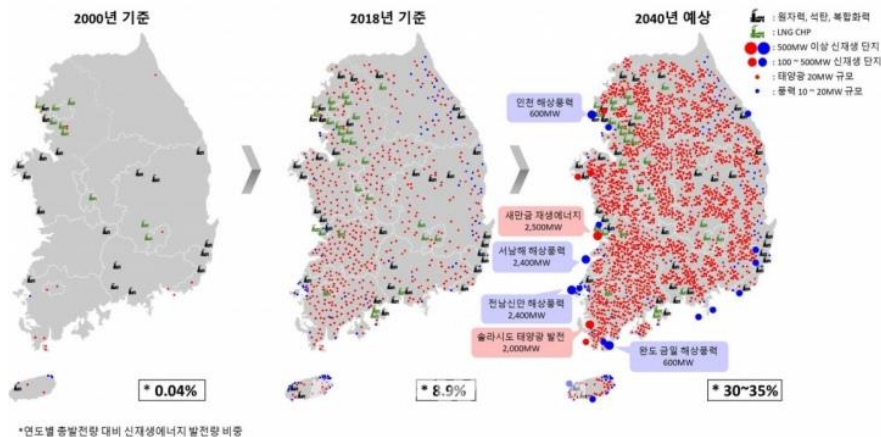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분산전원을 생산하는 것들에 시장에서 보상받는 전력가격과는 별도의 인센티브 지급
- 지역신호 제공이 가능하도록 송배전 이용요금제도도 바뀌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분산전원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 및 재생에너지 연계 ESS 등에 시장에서 보상받는 전력가격과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 40MW 미만의 재생에너지는 한국형 통합발전소(VPP)를 통해 전력시장에서 일반 발전소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로드맵은 전체적으로 색다르고 파격적인 방안이 나오기 보다는 이전부터 거론됐던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집대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산업부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법 형태의 '분산에너지법(가칭)'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7 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 설명회를 열어 로드맵에 담긴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한다. 아울러 설명회에서 나온 업계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본지가 입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산업부는 우선 "수요지 인근에서 저탄소 에너지를 생산·소비가래하는 선진국형 분산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생산·소비 인센티브 도입 ▶분산에너지 친화적인 시장제도로의 개편 ▶계통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CHP 발전용량 클수록 지원금액 줄어

분산에너지 인센티브 도입은 '분산편익 지원제도'로 구체화시켰다. **재생에너지나 DR, ESS처럼 이미 지원을 받는 자원이 아닌 집단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의 분산편익(송배전편익, 변동성편익)에 대해 kWh 당 일정금액을 전력가격과 별도로 지급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소(CHP)의 경우 발전용량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즉 40MW 미만, 40~150MW, 150~500MW로 구간을 나눠 발전용량이 작은 발전소에 지원을 더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연계 ESS는 발전량 예측제도 및 신재생 입찰에 참여하는 시설에 한정해 보조서비스시장 기여분을 고려해 지원액을 결정한다.

특히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편익 지원제도에 대한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 내년에 새로 제정하는 분산에너지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전력산업기반금을 활용한다며 재원까지 명시했다. 이는 분산전원 편익지원이 그동안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계획에서 수차례 거론됐으나, 실현되지 못했던 사례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시 전력계통 영향검토를 통해 수요 집중지역에 신규로 입주하는 전력수요를 분산하는 등 에너지수요 지역분산 지원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이 역시 분산에너지법에 반영해 수전용 송전설비 구축비용 절감을 통한 인센티브와 한시적 특례요금 또는 PPA 등을 검토한다. 또 에너지다소비사업장 내 자가소비량에 대해 사업용과 동등한 수준의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REC 를 지원하는 등 자사소비 지원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분산에너지 친화적인 시장제도로의 개편을 위해선 한국형 통합발전소(VPP) 제도를 도입해 40MW 미만의 재생에너지는 VPP 를 통해 전력시장에서 거래(입찰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용량요금(CP) 지급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분산에너지법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후 2022 년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3 년 신재생 입찰제도 도입과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발전부문에 지역별 송배전요금제 도입

지역신호 제공이 가능하도록 송배전 이용요금제도도 바꾼다. 발전부문은 송전망 손실혼잡비용 등이 반영된 지역별 요금제를, 수요부문은 대규모 수용가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향이다. 산업부는 지역신호 제공 및 비용유발자 부담원칙 제고로 송배전 설비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수요공급 분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계통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서 한전-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스마트인버터 및 정보제공장치 설치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한전 주도로 오는 2025 년까지 계통안정화 ESS(1.8GW)를 구축하는 한편 배전계통 운영제도를 도입해 배전망운영자(DSO)와 감독기관인 배전감독원 설립도

추진한다.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아 통합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는 등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시스템 구축도 본격화한다. 새만금과 같은 재생에너지 집중지역, 구역전기사업 공급구역, 산업단지 등에 특구를 조성해 전력의 개인간 거래(P2P) 및 지역내 분산에너지(태양광풍력)를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지역주도의 에너지전환 및 그린뉴딜 등의 실현을 위한 거점으로서 지역에너지센터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역에너지센터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에너지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것을 물론 정책사업기획, 홍보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020. 12. 02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 처) 서울경제

<https://www.secdaily.com/NewsView/1ZBUQXYA3>

(요약) 현금 대신 미술품으로 상속세 낼 수 있을까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물납은 부동산, 유가증권만 인정, 문화재와 미술품 물납제 도입 요구하는 목소리
- 물납대상 미술품의 범위와 가치평가 등과 같은 논란거리는 여전히 많아

“대한민국이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확산된 성숙한 사회를 이루고, ‘생계형 현금 복지’에서 ‘보편적 문화 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문화재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납할 수 있는 물납제도가 필요합니다.”(정준모 큐레이터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미술품을 물납 대상에 추가하려면 해당 미술품이 수납할 가치가 있는 미술품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판단 주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김소영 한미회계법인 회계사)

문화재와 미술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공동 주최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1일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참여를 최소화 하고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됐다. ‘물납제도’란 상속세, 재산세를 납부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현금 대신 법이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물납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해 인정하고 있는데, 지난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물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것을 계기로 문화계 안팎에서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10월 7일 발표한 입법정책보고서에서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정책과 법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문화재와 예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준모 미술비평가는 “영국은 이미 120여 년 전에 자국 문화재미술품의 해외반출을 막고자 상속세 물납이 가능하게 법을 제정했고, 1968년 대물변제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는 상속세뿐 아니라 증여세·부유세도 물납이 가능한 데다 미술품을 기증하면 기부금으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운영한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세금은 없어지지만 물납은 영원히 남는 데다, 가치 상승으로 국부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를 도입하려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김소영 회계사는 “물납 대상 미술품의 범위와 가치평가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생존 작가 작품의 허용 여부, 상속세 납세를 유족으로 한정할지, 일반 소장가일 경우 보유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술품 가치의 과대평가 가능성이 있고 물납 후 사후 관리 비용도 국가 부담인 점을 고려하면 수납가액을 80%~90%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 큐레이터는 “상속세 납부 시 가격 산정을 위해 2인 이상 감정인의 감정이 평균액 또는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 한 액수를 택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0. 1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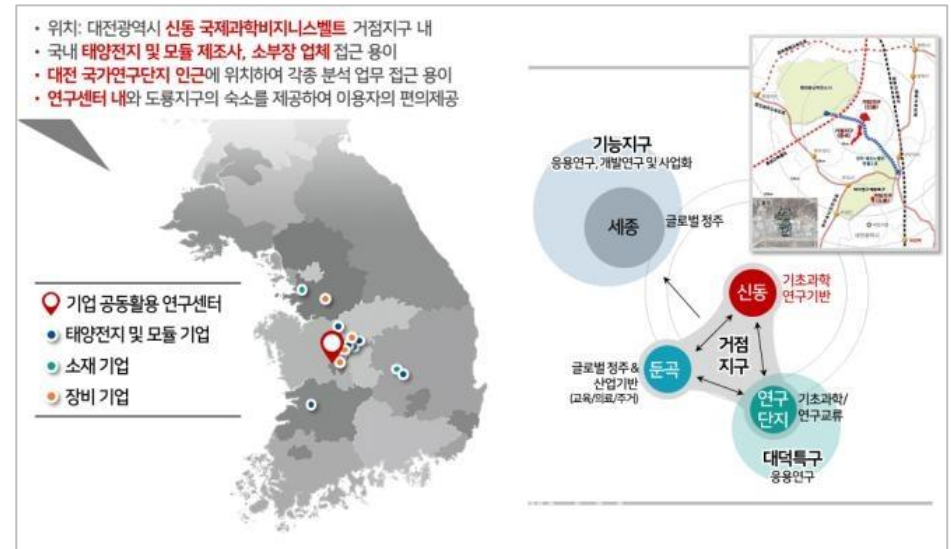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처) 투데이에너지

[기사링크](#)

(요약) 탄소중립 대응 기업공동 태양광 R&D센터 구축

- 태양광 개발제품 양산하기 전 단계의 공정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구축...총 사업비 약 500억원
- 100MW급 파일럿 라인 구축, 차세대 태양전지 공동 개발, 태양광 제품 성능효율 측정 지원 전망



정부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기업공동 태양광 R&D센터를 구축한다. 특히 기업공동R&D와 양산성 검증 지원으로 2030년까지 태양전지 효율 35%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일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주관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참여기관 대전테크노파크, 고려대학교, 충남대학교로 최종 확정했다. 이를 통해 국내 태양광 업계가 바래왔던 태양광분야의 R&D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약 9,840㎡(약 3,000평) 부지에서 진행되는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사업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한 그린뉴딜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국내 태양광 셀·모듈 기업 및 관련 소부장품장비 기업들이 공동활용하는 100MW급 파일럿(pilot) 라인 등을 구축함으로써 기업간 협력형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태양광 개발제품을 양산하기 전 단계의 공정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구축해 국내 태양광 산업생태계의 R&D 역량 및 생산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2020~2022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약 500

억원(정부 250억원·지방비 210억원 등)이다.

이를 통해 △100MW급 파일럿 라인 구축 △파일럿 라인 등 활용 △차세대 태양전지 공동 개발 △세계적 수준의 태양광 제품 성능·효율 측정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을 향한 글로벌 기술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대학·공공 연구기관 등 국내 태양광 생태계의 보유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R&D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국내 태양광 산업계 요구로부터 시작됐다.

산업부는 올해 제3차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 예산을 반영했으며 지난 9월에는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의 성공적인 구축·운영을 위해 국내 태양광 업계들과 MOU도 체결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제품의 효율·단가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며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가 우리 태양광 업계의 초격차 기술혁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지난 9월 '태양광 R&D 혁신전략'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2030년 태양전지 효율 35% 달성(해외 경쟁사 대비 기술격차 2년 이상 확보)을 목표로 세계적으로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탠덤 태양전지' 양산화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의 관계자는 "연구센터 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R&D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특히 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의 협력형 R&D가 활발히 이뤄짐에 따라 국내 태양광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2월 중 '태양광 공동 연구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파일럿 라인 설계, 장비도입 사양, 향후 센터운영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는 2021년 6월 착공을 시작해 2021년 12월까지 모듈 라인 구축을 완료한 이후 2022년 4월까지 셀 라인 등의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2년 6월경 최종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모듈라인 구축이 완료되는 2022년 1월부터 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2020. 12.03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처) 한국경제

[기사링크](#)

(요약) 외환보유액 4363억8000만달러... 10년 만에 최대폭 증가

- 외환보유액 한 달 새 10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환율 하락에 의한 기타 통화 달러 환산액 증가 영향
-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 약 4364억달러...세계 9위 수준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스위스)



외환보유액이 한 달 새 100억달러 가량 급증하면서 10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했다. 원/달러 환율 하락에 달러 가치가 대폭 하락하면서 기타 통화의 달러 환산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0년 11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363억8000만달러로 전월대비 98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증가 폭은 지난 2010년 7월(117억4000만달러)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달러 가치가 대폭 절하하면서 호주달러화, 파운드가 등 기타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주요 6개국 통화 대상 달러 인덱스(DXY)는 91.79로 전월대비 23% 하락했다. 이에 호주달러화는 5.1% 파운드는 3.0% 유로화는 2.5% 절상됐다. 이와 함께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늘어난 점도 외환보유액이 늘어난 배경이다.

자산별로는 유가증권이 3946억4000만달러로 전체 외환보유액의 90.4%를 차지했다. 예치금 293억2000만달러(6.7%), 금 47억9000만달러(1.1%), 국제통화기금(IMF) 포지션 44억달러(1.0%),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32억2000만달러(0.7%)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0월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4265억달러)은 세계 9위를 유지했다. 1위 중국은 3조1280억달러로 한 달 동안 146억달러 감소했다. 2위 일본은 1조3844억달러, 3위 스위스는 1억217만달러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 12. 04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신문사 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727	
(요약) 환경부, 내년부터 수소충전소당 약 9천만원 지원 - 수소충전소가 높은 수소구입비와 수소차 부족으로 연간 1억 5천만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 신규 부지발굴,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수소충전소 확충이 가속화 될 계획	
<p>내년부터 수소충전소는 한 곳당 약 9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p> <p>환경부가 3일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수소연료 구입비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p> <p><u>수소충전소가 높은 수소 구입비와 수소차 부족 등으로 연간 평균 1억 5000만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u></p> <p>환경부는 수소충전소 당 최소 7천만원을 지원하고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 사업자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p> <p>지원금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기준단가간 차액 70%로 산정된다.</p> <p>수소충전소별 지원 수준은 올해 운영 결과에 따라 추후 세부적으로 정해지며 약 9천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p> <p>더불어 관계부처·기관과 협업을 통해 <u>신규 부지 발굴과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과 유기적인 사업 관리 등 수소충전소 확충이 가속화 될 계획</u>이다.</p> <p>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사업 활성화를 견인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수소충전소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p>	
	

2020. 12. 04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파이낸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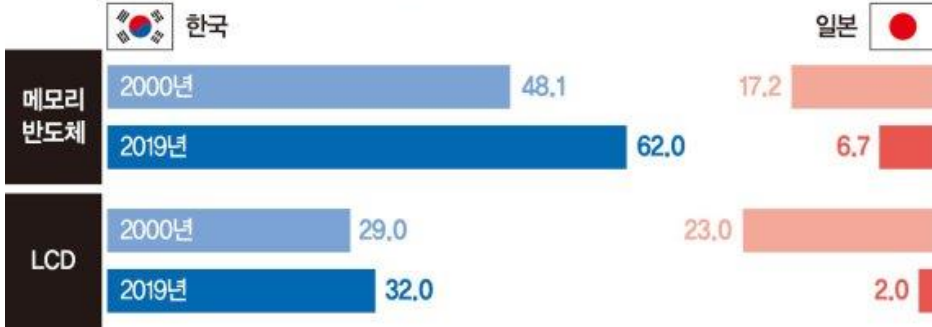
<https://www.fnnews.com/news/202012031823321446>

(요약) 한국 수출 '대약진' 7년내 일본 넘는다

- 1977년 세계 수출 20위였으나 42년간 996%늘어나 세계 7위 수출강국으로 도약

- 20여년전 일본의 주력산업이던 철강,조선자동차,전자등은 이제 한국의 주력산업으로

한·일 주력품목, 세계 시장 점유율 변화 (단위 : %)



	한국	일본
메모리 반도체	2000년 48.1	17.2
	2019년 62.0	6.7
LCD	2000년 29.0	23.0
	2019년 32.0	2.0

한국이 7년 후 일본을 뛰어넘는 수출강국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4년 안에는 기술력도 일본을 앞설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018년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수출 6000억달러를 달성한 한국이 향후 7년 안에 5위권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3일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977년 세계 20위 수출중견국에 진입한 한국은 이후 42년간 연평균 수출이 9.96% 늘어나 지난해 수출 5418억달러, 수출시장 점유율 2.9%, 세계 7위 수출강국으로 도약했다. 앞으로 한국이 5위 수출국에 진입하면 일본을 추월하게 된다. 지난해 세계 5위 수출국인 일본과 한국의 수출액 차이는 1637억달러이며 세계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0.7%포인트 낮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 실장은 "앞으로 한국 수출이 연평균 1.68%인 2010년대(2011~2019년) 성장세만 유지해도 수출경쟁력 약화가 뚜렷한 일본을 추월해 7년 후 세계 5위 수출국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0년대 한국 수출은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반면 일본은 핵심 수출품목인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수출에 부침을 겪으면서 연평균 0.96%씩 쪼그라들었다.

올해는 코로나 19 글로벌 경제위기로 상반기 세계교역이 전년동기 대비 12.9% 감소한 가운데 한국도 수출이 11.3% 줄었다. 다만 이는 세계 20대 수출국 평균(14.2%)을 밑도는 수준이며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과 비교해도 각각 4.2%포인트, 2.7%포인트 선방한 것이다.

산업계는 세계 5위 수출국 진입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당국의 공세적 통상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다자 글로벌 무역질서를 중시하는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의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프레임워크 복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한국의 TPP 가입여건을 조성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서비스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9대 수출 주력산업 점유율을 보면 2000년 1위 산업 개수는 일본이 6개, 한국이 2개였지만 지난해에는 일본 1개, 한국 1개였다. 오는 2024년께는 일본은 1위 산업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여년 전 일본의 주력산업이던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등은 이제 한국의 주력산업이 됐다. 특히 원천기술을 보유했으나 후발주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밀린 일본의 메모리반도체는 점유율이 6%대까지 떨어졌고 자동차와 철강, 조선, 전자 등도 우리 기업의 눈부신 성장 속에 1위 자리에서 속속 밀려났다.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일본 기업은 1995년 148개에서 2019년 52개로 급감했다.

2024년께는 일본의 마지막 보루인 기술력마저 한국이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의 기술력을 100으로 놓고 9대 주력업종 기술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2000년 일본은 1138로 상당한 우위를 보였지만 현재는 1028 수준까지 좁혀졌다. 이재수 전경련 팀장은 "2024년쯤에는 일본이 974로 한국의 기술력이 비교우위를 점할 것"이라며 "다만 자동차(117.4), 섬유(116.3), 석유화학(108.3), 일반기계(107.1) 등에선 여전히 일본이 앞설 것"으로 내다봤다.